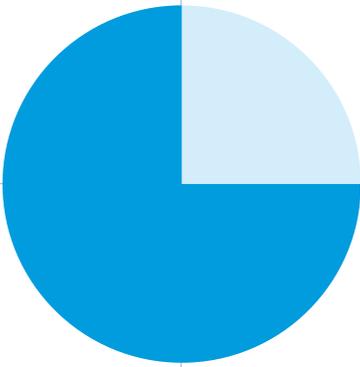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연구책임자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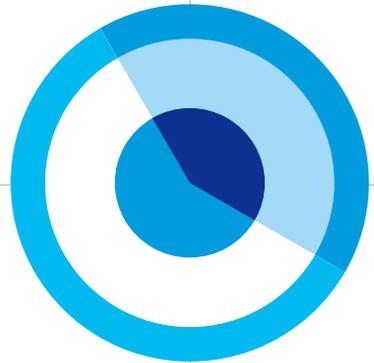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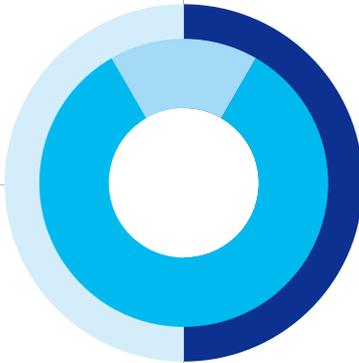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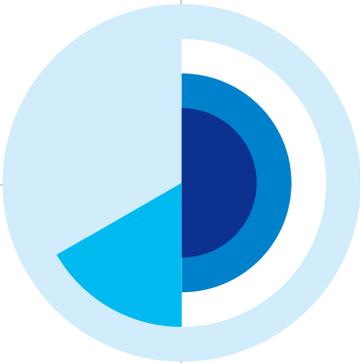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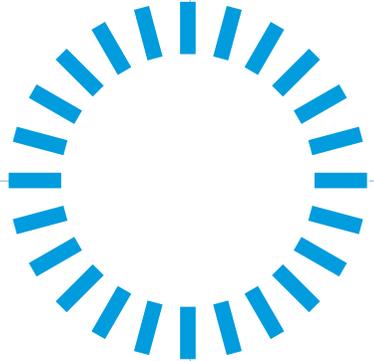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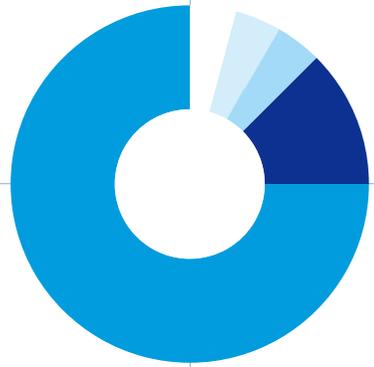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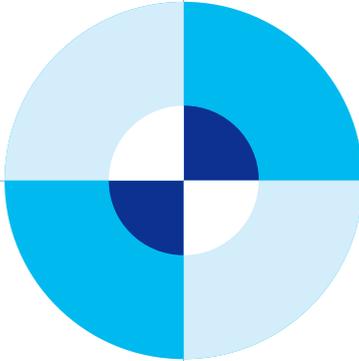
민태은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철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일 | 숙명여대 교수

구분상 | 충북대 교수

박주화 | 북한대학원대 교수



Executive Summary

조사기간
2025.7.10.~8.13.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연구책임자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민태은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철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일 | 숙명여대 교수

구본상 | 충북대 교수

박주화 | 북한대학원대 교수

목차

I.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1. 연구목적	6
		2. 코호트 분석	6
		3. 조사개요	7
		4. 주요 조사결과 요약	7

II.	통일인식	1. 통일 필요성	12
		2. 평화적 공존 선호	14
		3. 적대적 공존 선호	17

III.	북한에 대한 관심과 대북정책	1. 북한에 대한 관심	22
		2.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	23
		3. 스포츠 및 문화·인적 교류 확대	24
		4.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25
		5. 인도적 지원	26
		6. 개성공단 재개	27
		7. 남북정상회담 재개	28

IV.	미국인식 및 한미관계	1.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32
		2. 한미관계 평가와 전망	33
		3.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34
		4. 방위비 분담금	35
		5. 북미정상회담 재개	36

V.	중국인식 및 국제관계	1. 한국 외교의 방향과 미중경쟁에 대한 인식	38
		2. 대미·대중외교 방향	39
		3.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41
		4. 중국에 대한 감정	42
		5. 양안(兩岸)관계: 중국의 팽창에 대한 대응	44

I.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I.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1. 연구목적

KINU 통일의식조사는 대면조사(face-to-face survey)를 통해,

- (1) 국민들의 통일, 북한, 대북·통일정책,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과 안보관,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연구하고,
- (2) 이러한 인식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며,
- (3)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대북·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코호트 분석

KINU 통일의식조사의 코호트

- 기존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사시점에서의 응답자들의 현재적 연령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함.
- 예를 들어 “20대”, “30대” 등임.
- 그러나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탄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코호트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음. 코호트 분류는 기존연구들을 문헌조사하여 결정하였음.
- 2025년 조사부터는 2001년 이후 출생자들을 Z세대로 분류하기 시작함.

[표 I-1] KINU 통일의식조사의 한국 사회 코호트 분류

코호트	탄생년도	2025년 조사 빈도	%
전쟁세대	1950년 이전 출생	58	5.8
산업화세대	1951년-1960년	153	15.3
386세대	1961년-1970년	227	22.7
X세대	1971년-1980년	181	18.1
IMF세대	1981년-1990년	152	15.2
밀레니얼세대	1991년-2000년	179	17.9
Z세대	2001년 이후 출생	50	5.0
합계		1,000	100.0

3. 조사개요

[표 1-2]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2025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
표집방법	2025년 6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단위	총 1,000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PI: Personal Interview)
조사기간	2025년 7월 10일 ~ 8월 13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4. 주요 조사결과 요약

II. 통일인식

- 통일 필요성: 2025년 “통일 필요하다” 49.0%로 조사 이래 최저치, 과반 붕괴. 범세대적으로 하락
- 평화적 공존: 63.2%로 최고치. 세대가 젊을수록 공존 선호 강함. 정치이념 간 차이는 거의 없음.
- 적대적 공존: 47%가 “분단 상태도 괜찮다” 응답. 특히 IMF·밀레니얼 세대에서 과반이상 수용. 이념별 차이는 미미
- 종합: 통일 필요성은 하락, 대신 평화적·적대적 공존이 모두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 확인

III. 북한에 대한 관심과 대북정책

- 북한에 대한 무관심: 2015년 50.8% → 2025년 68.1%. 남북관계 변화와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무관심 지속적 증가
- 경제협력: 과반이 찬성(53.8%), 정당별로 차이 존재하나 보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 우세
- 스포츠·문화·인적 교류: 약 70% 찬성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 정치·경제 부담 없는 “안전한 교류”로 인식

-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반대 61%로 역대 최고 기록. 2015년 찬성 다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 역전. 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어 남북 군사적 갈등을 유도한 것에 영향받았을 가능성 높음.
- 인도적 지원: 긍정(36.8%)보다 부정(39.5%)이 처음으로 높아짐. 북한 경제상황 개선 인식 반영
- 개성공단 재개: 부정적 반응이 우세.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국민의힘·무당파는 반대 다수. 정파 갈등 가능성
- 남북정상회담: 찬성 69.4%. 민주당 지지층 압도적 찬성, 보수층도 과반 찬성. 범정치권적 지지 확보

IV. 미국 인식 및 한미관계

- 미국 자국우선주의: 65.7%가 “미국은 한국 이익 고려하지 않는다” 인식. 트럼프 2기 영향 반영. 보수층에서도 비판적 시각 증가
- 한미관계 평가: ‘악화’ 응답 급증, 향후 5년 후 전망에서도 ‘나빠질 것’ 응답 증가 (2022년 4.8% → 2025년 20.4%)
-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10년 내 철수 전망 증가. ‘철수 안 함’ 응답은 46.5% → 35.6%로 감소. 동맹 지속성에 의구심 확대
- 방위비 분담금: 현 수준 유지 선호 감소, 축소 선호 증가(34.3%). 한국의 기여 충분하다는 인식 반영
- 북미정상회담: 조건부 찬성이 다수. 북한 비핵화 없는 회담엔 회의적. Z세대는 가장 냉소적 태도

V. 중국 인식 및 국제관계

- 외교 방향: 여전히 균형외교가 다수, 그러나 ‘미국과 동맹 강화’ 선호 11%p 상승. 불확실성 속 미국을 안전판으로 인식
- 대미·대중 외교 방향: 전반적으로 미중 간 균형외교 > 한미동맹 강화 > 자주 외교 > 한중동맹 강화 순. 중장년층은 균형외교 선호, 청년·노년층은 미국 동맹 강화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정당별 차이: 민주당 지지층은 균형외교 강하게 지지,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미 동맹 지향

-
- 주변국 관계 전망: 한중·한일관계 개선 기대 상승. 악화 전망은 10%대 초반에 불과. 한미관계 전망은 지지정당별로 갈림.
 - 중국 감정: 분노·역겨움·두려움 평균 2~3점으로 중간 수준. 보수층이 다소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 없음.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중국 선거개입설: 17.8%가 신뢰. 선거개입 음모론을 신뢰할수록 중국에 대한 분노·역겨움 강해짐. 비민주적 태도로 이어질 잠재성
 - 대만 병합 대응: 전체적으로 동의 수준 하락(2021년 > 2025년). 진보=친중, 보수=반중 프레임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II. 통일인식



II. 통일인식

1. 통일 필요성

[그림 II-1] 통일 필요성: 2014~2025



	2014 Sep	2015 Jul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 필요하다	69.3	68.5	62.1	57.8	70.7	65.6	64.6	60.2	52.7	58.7	55.4	53.4	53.9	52.8	49.0
— 필요하지 않다	30.7	31.5	37.9	42.2	29.3	34.4	35.4	39.8	47.3	41.3	44.6	46.6	46.1	47.2	51.0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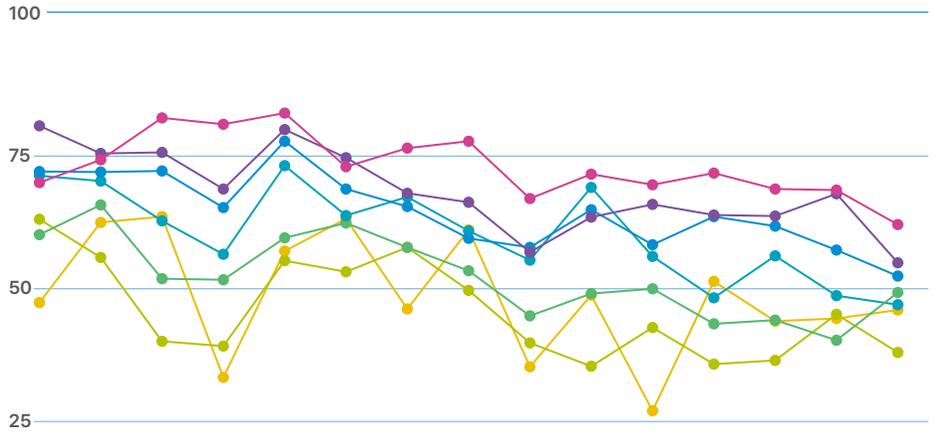
- 질문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별로 필요하지 않다; 3=약간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
- 1+2=‘필요하지 않다’, 3+4=‘필요하다’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조사 도입 이래 통일 필요성 인식은 가장 낮은 수준

- 2025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9.0%로 2014년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조사가 도입된 이래 최저치
-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3.8%p 감소하면서 과반 이하로 하락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향, 남북관계 단절의 지속, 그리고 국내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보임.
-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단기적 변동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

범세대적인 통일 필요성 인식의 저하

[그림 II-2] 통일 필요성 - 코호트별 비교: 2014~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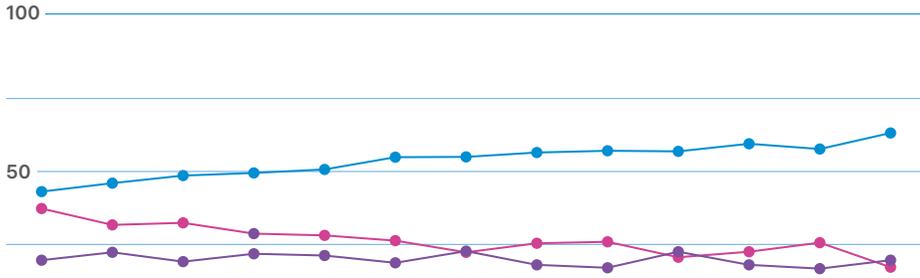


	2014 Sep	2015 Jul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전쟁세대	70.0	74.3	82.2	81.0	83.1	73.0	76.5	77.8	67.0	71.6	69.6	71.8	68.8	68.6	62.1
산업화세대	80.7	75.5	75.7	68.8	80.0	74.7	68.0	66.3	56.9	63.5	65.9	63.9	63.7	67.9	54.9
386세대	72.1	72.0	72.2	65.3	77.8	68.8	65.5	59.5	57.8	64.9	58.3	63.6	61.8	57.3	52.4
X세대	71.3	70.3	62.8	56.5	73.2	63.8	67.3	60.9	55.4	69.1	56.1	48.3	56.2	48.7	47.0
IMF세대	60.2	65.8	51.9	51.7	59.6	62.4	57.8	53.4	44.9	49.1	50.0	43.4	44.1	40.3	49.3
밀레니얼세대	63.1	55.9	40.1	39.2	55.3	53.2	57.8	49.7	39.8	35.4	42.7	35.8	36.5	45.2	38.0
Z세대	47.4	62.5	63.6	33.3	57.1	63.2	46.2	61.1	35.3	48.8	27.0	51.4	43.9	44.4	46.0

- 모든 세대에서 통일 필요성 인식 하락 현상 관찰됨.
- 통일 인식 저하가 특정 세대 국한이 아닌 범세대적 포괄 현상임을 시사

2. 평화적 공존 선호

[그림 II-3] 평화적 공존 선호: 2016~2025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 동의	43.1	46.0	48.6	49.5	50.7	54.9	55.0	56.5	57.1	56.9	59.5	57.7	63.2
— 보통	19.6	22.3	19.1	21.8	21.2	18.7	22.7	18.0	17.0	22.5	18.0	16.7	19.6
— 비동의	37.3	31.7	32.4	28.7	28.1	26.3	22.3	25.4	25.9	20.6	22.5	25.6	17.2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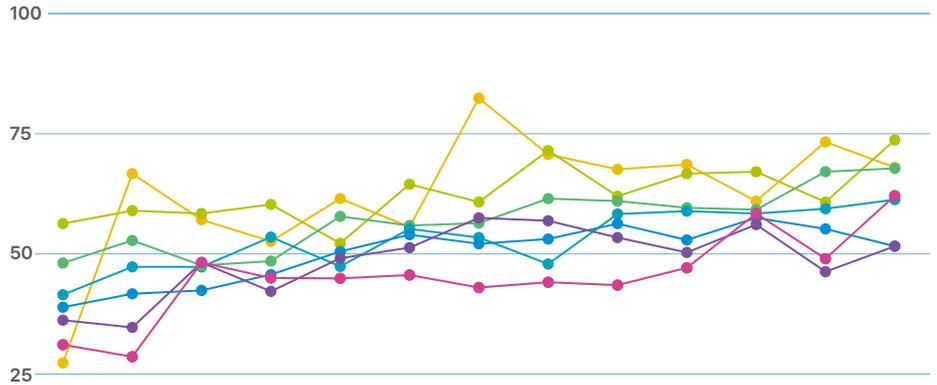
- 질문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
-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1+2=‘비동의’, 3=‘보통’, 4+5=‘동의’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조사 도입 이래 평화적 공존 선호 최고 수준

- 2025년 조사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3.2%로 2016년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조사 문항에 포함된 이래 최고치 기록
- 평화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7년 이후 ‘보통’ 응답비율과 ‘비동의’ 응답 비율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경향이 지속된 가운데 조사 이래 처음의 평화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이 60%를 상회
- 2025년은 남북 대화·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누적되면서 국민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모든 코호트에서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화

[그림 II-4] 평화적 공존 선호 - 코호트별 비교: 2016~2025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전쟁세대	31.1	28.6	48.2	45.0	44.9	45.6	43.0	44.1	43.5	47.1	58.4	49.0	62.1
산업화세대	36.2	34.7	48.2	42.2	49.1	51.3	57.5	56.9	53.4	50.3	56.1	46.3	51.6
386세대	38.9	41.7	42.4	45.7	50.5	54.0	52.1	53.1	56.3	52.9	57.5	55.2	51.6
X세대	41.5	47.3	47.3	53.5	47.4	55.2	53.4	47.9	58.3	58.9	58.4	59.4	61.3
IMF세대	48.1	52.8	47.6	48.5	57.8	55.9	56.4	61.5	61.0	59.6	59.2	67.1	67.8
밀레니얼세대	56.3	59.0	58.4	60.3	52.2	64.5	60.8	71.5	62.0	66.7	67.1	60.8	73.7
Z세대	27.3	66.7	57.1	52.6	61.5	55.6	82.4	70.7	67.6	68.6	61.0	73.3	68.0

- 모든 코호트에서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연령대가 낮은 코호트일수록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추세도 발견됨.
- 2025년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로 응답자의 73.7%가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년 대비 12.9%p 상승
-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은 세대는 산업화 세대와 386세대로 각각 응답자의 51.6%가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고 응답

정치이념별 평화적 공존 선호의 차이는 미미

[그림 II-5] 평화적 공존 선호 - 이념별 비교: 2016~2025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진보	36.0	33.6	50.8	48.0	43.7	57.1	43.0	46.7	53.6	54.2	57.3	55.6	62.8
중도	47.7	51.2	48.1	48.7	54.0	52.8	57.2	58.1	55.6	59.2	61.2	60.4	61.7
보수	43.1	48.7	46.8	52.4	53.3	55.7	63.2	62.0	60.8	56.7	59.4	57.0	65.2

- 2016년 이후 모든 이념층에서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경향 관찰
- 이념 차이가 관찰된 통일 필요성 여론과는 달리 2025년 조사에서 진보의 62.8%, 중도의 61.7%, 보수의 65.2%가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념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

3. 적대적 공존 선호

[그림 II-6] 적대적 공존: 2018~2025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 동의	27.0	26.2	25.2	37.2	38.8	36.2	40.4	35.2	44.5	45.8	47.0
— 보통	26.5	36.8	39.4	31.2	37.8	33.2	30.3	34.9	26.7	24.5	27.7
— 비동의	46.5	37.0	35.4	31.6	23.4	30.6	29.3	29.9	28.9	29.8	25.3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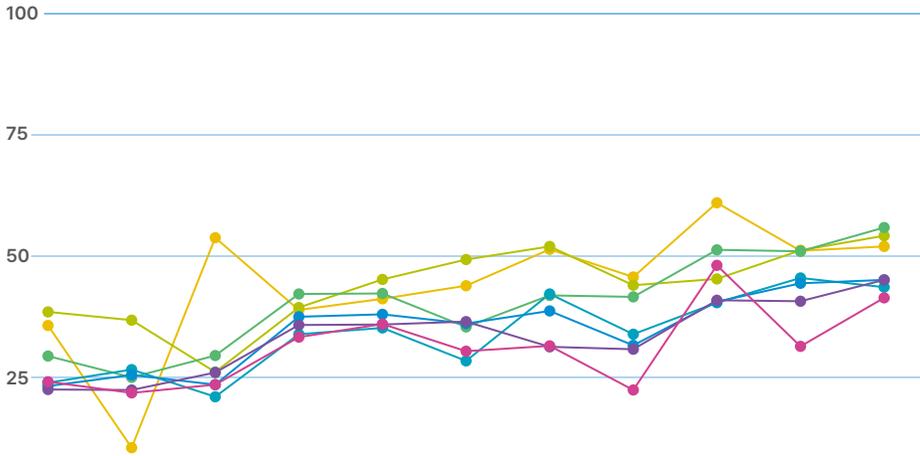
- 질문 “통일보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
-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1+2=‘비동의’, 3=‘보통’, 4+5=‘동의’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남북관계 단절의 장기화와 적대적 공존의 딜레마

- 2022년을 기점으로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적대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화
- 2025년 조사결과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도 괜찮다는 응답 비율은 47%로 ‘보통’ 응답 비율 27.7%,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 25.3%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위협은 일상화되었지만 즉각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상태도 버틸 만하다”는 인식 확산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적대적 공존에 대한 거부감 약화
- 적대적 공존 선호 증대는 국민이 갈등을 원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변화보다 현상 유지가 낫다고 느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평화적 공존뿐만 아니라 적대적 공존 선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에 주목할 필요

모든 세대에서 적대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화

[그림 II-7] 적대적 공존 - 코호트별 비교: 2018~2025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전쟁세대	24.1	21.8	23.5	33.3	36.0	30.4	31.5	22.4	48.1	31.4	41.4
산업화세대	22.5	22.4	26.0	35.8	35.9	36.5	31.3	30.8	40.9	40.7	45.1
386세대	23.2	25.5	23.5	37.5	38.0	36.1	38.7	31.6	40.6	44.4	45.1
X세대	23.9	26.6	21.0	33.9	35.2	28.4	42.2	33.9	40.4	45.5	43.6
IMF세대	29.4	25.0	29.5	42.2	42.3	35.4	41.9	41.6	51.3	51.0	55.9
밀레니얼세대	38.5	36.8	26.1	39.4	45.2	49.3	52.0	44.0	45.3	51.2	54.2
Z세대	35.7	10.5	53.8	38.9	41.2	43.9	51.4	45.7	61.0	51.1	52.0

- 모든 세대에서 적대적 공존을 수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연령대가 낮은 세대일수록 적대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세대효과 관찰
- 적대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세대는 IMF 세대(55.9%)와 밀레니얼 세대(54.2%)로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적대적 공존도 가능하다고 응답

이념에 따른 적대적 공존에 대한 선호 차이는 미미

[그림 II-8] 적대적 공존 - 이념별 비교: 2018~2025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 진보	23.9	21.4	20.2	38.5	28.3	31.6	35.9	34.2	40.7	42.8	43.8
■ 중도	28.9	28.3	27.0	35.8	40.6	35.2	37.3	38.3	44.1	47.5	48.1
■ 보수	27.4	28.1	28.1	37.8	46.0	41.2	46.7	33.0	47.3	46.6	49.1

- 모든 이념층에서 적대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추세
- 2025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3.8%p 하락한 49.0%로 2014년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조사가 도입된 이래 최저치
- 반면 평화적 공존을 선호한 응답은 63.2%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화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이 60%를 상회
- 한편 통일보다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존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평화적 공존뿐만 아니라 적대적 공존 선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가 강화되는 추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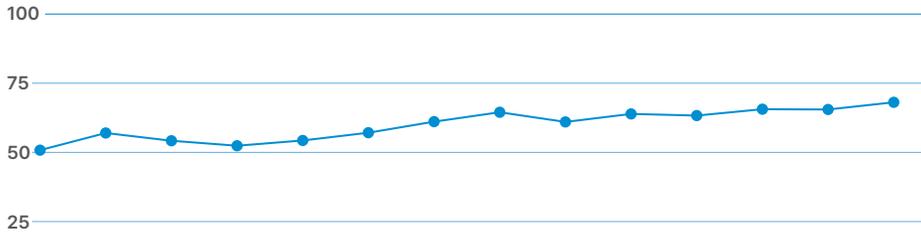
III. 북한에 대한 관심과 대북정책



III. 북한에 대한 관심과 대북정책

1. 북한에 대한 관심

[그림 III-1] 북한에 대한 관심: 2015~2025



북한관심도	2015 Jul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북한 무관심	50.8	57.0	54.2	52.4	54.3	57.1	61.1	64.5	61.0	63.9	63.3	65.6	65.5	68.1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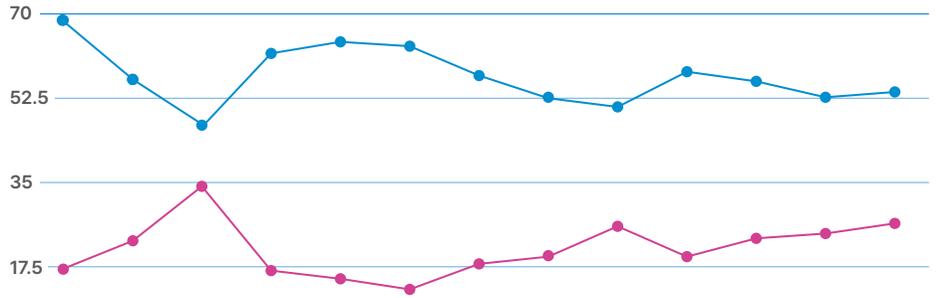
- 질문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척도 1=전혀 관심이 없다; 2=별로 관심이 없다; 3=다소 관심이 있다; 4=매우 관심이 있다
- 1+2=‘북한 무관심’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북한에 대한 무관심의 지속적인 증가

- 2015년 이후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답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5년에 50.8%가 무관심했던 것에 비해 2025년에는 68.1%로 최고치 기록
- 2015년에서 2025년 사이에 남북관계는 많은 부침을 거듭했고, 다른 항목에서는 이 부침의 영향이 뚜렷이 드러남.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 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음.

2.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

[그림 III-2]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 2015~2025



대북경제교류협력	2015 Jul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경제협력 찬성	68.7	56.4	46.9	61.8	64.2	63.3	57.2	52.7	50.7	58.0	56.0	52.7	53.8
경제협력 반대	17.0	22.9	34.2	16.7	15.0	12.8	18.1	19.8	25.9	19.6	23.4	24.4	26.5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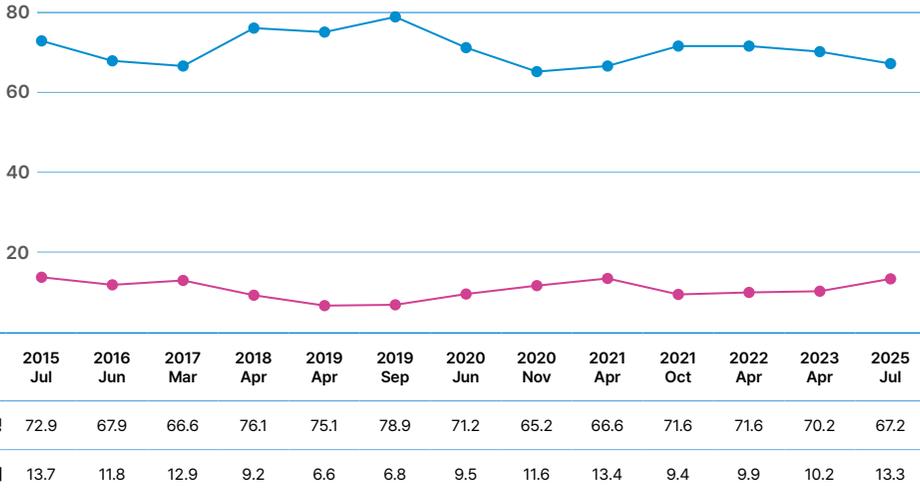
- 질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 척도 0=매우 반대한다 ~ 10=매우 찬성한다
- 0+1+2+3+4=‘경제협력 반대’ 6+7+8+9+10=‘경제협력 찬성’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과반수의 응답자가 남북 경제 교류에 긍정적

- 남북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 경제협력을 찬성하는 비율이 46.9%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찬성 여론은 줄곧 50%에서 60%를 넘고 있음.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현재에도 50% 이상의 국민들은 남북 경제 교류에 긍정적임.
- 지지정당별로 나누어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62.8%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자는 46.6%(반대 30.6%), 무당파의 46.0%가 찬성(반대 36.2%). 보수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음.

3. 스포츠 및 문화·인적 교류 확대

[그림 III-3] 스포츠 및 문화·인적교류: 2015~2025



조사문항

- 질문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척도 0=매우 반대한다 ~ 10=매우 찬성한다
- 0+1+2+3+4=‘스포츠교류 반대’; 6+7+8+9+10=‘스포츠교류 찬성’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스포츠, 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높은 지지가 지속됨

- 여러 형태의 남북 교류 중에서 가장 찬성률이 높은 것은 스포츠 및 문화교류, 인적교류임.
- 이는 경제적 부담이나 정치적 민감성이 없는 “안전한” 형태의 남북 접촉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 이런 이유로 외적 요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7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검색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제약과 부담이 따르는 경제협력보다 좀 더 가벼운 스포츠·문화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내 여론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임.

4.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그림 III-4]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2015~2025



	2015 Jul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1 Apr	2024 Apr	2025 Jul
대북전단 찬성	61.6	58.9	43.7	38.8	33.0	38.1	21.9	27.8	20.1
대북전단 반대	21.8	24.3	28.8	30.7	43.5	38.4	53.9	44.0	61.0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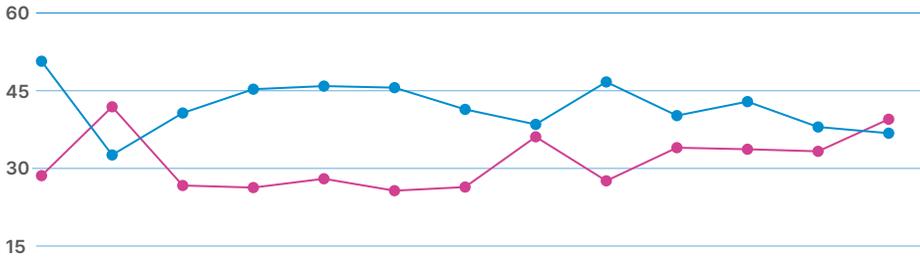
- 질문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확성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척도 0=매우 반대한다 ~ 10=매우 찬성한다
- 0+1+2+3+4=‘대북전단 반대’; 6+7+8+9+10=‘대북전단 찬성’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여론

- 대북 전단이나 라디오 방송 등, 북한에 대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 수단에 대한 반대 여론이 2024년 44.0%에서 2025년 61%로 급증
- 이는 계엄 사태 이후 이전 정부가 북한에 무인 드론을 보내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려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그 위험성을 국민들이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임.
- 보수 정부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방송을 북한에 대한 유력한 대응으로 홍보했으며, 실제로 2015년 조사에서는 찬성 61.6%, 반대 21.8%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9.19 군사합의를 기점으로 여론이 역전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반대 여론이 60%를 넘고 있음.
-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철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도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음.

5. 인도적 지원

[그림 III-5] 인도적 지원: 2016~2025



지원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3 Apr	2024 Apr	2025 Jul
인도적지원 찬성	50.7	32.6	40.7	45.3	45.9	45.6	41.4	38.5	46.7	40.2	42.9	38.0	36.8
인도적지원 반대	28.6	41.9	26.7	26.3	28.0	25.7	26.4	36.1	27.6	34.0	33.7	33.3	39.5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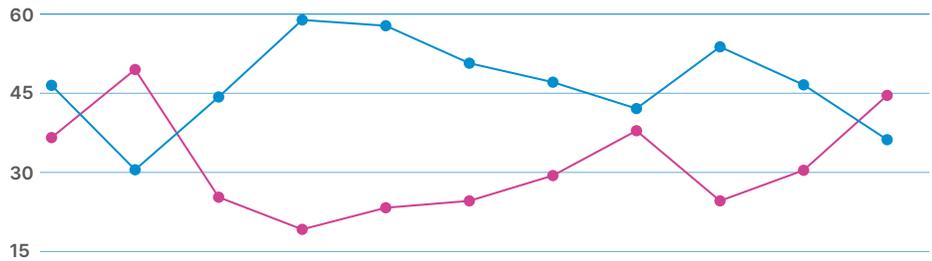
- 질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 척도 0=매우 반대한다 ~ 10=매우 찬성한다
- 0+1+2+3+4=‘인도적지원 반대’; 6+7+8+9+10=‘인도적지원 찬성’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 추세

-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최초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39.5%로 긍정 여론 36.8%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로부터 이탈하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더 이상 북한의 식량부족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전처럼 북한의 식량이나 의약품 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론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북한이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함.

6. 개성공단 재개

[그림 III-6] 개성공단 재개: 2016 ~ 2025



	2016 Jun	2017 Mar	2018 Apr	2019 Apr	2019 Sep	2020 Jun	2020 Nov	2021 Apr	2021 Oct	2022 Apr	2025 Jul
개성공단 찬성	46.5	30.5	44.3	58.9	57.8	50.7	47.1	42.1	53.8	46.6	36.2
개성공단 반대	36.6	49.5	25.3	19.2	23.3	24.6	29.4	37.9	24.6	30.4	44.6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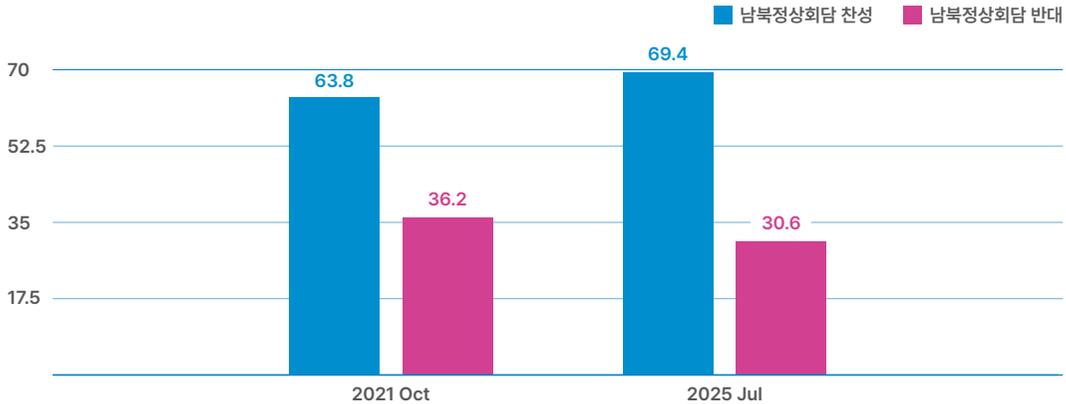
- 질문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 척도 0=매우 반대한다 ~ 10=매우 찬성한다
- 0+1+2+3+4=‘개성공단 반대’; 6+7+8+9+10=‘개성공단 찬성’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물었을 때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음.
- 개성공단은 특히 지지정당에 따라 찬성과 반대에 큰 차이가 관찰되었음. 2025년 조사 기준 민주당 지지자는 찬성 49.1%, 반대 31.9%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찬성 26.1%, 반대 57.5% 였음. 무당파층에서는 찬성 22.1%, 반대 55.4% 로 조사됨.
- 따라서 만약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면 이는 정파 간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음.

7. 남북정상회담 재개

[그림 III-7] 남북정상회담: 2021년 및 2025년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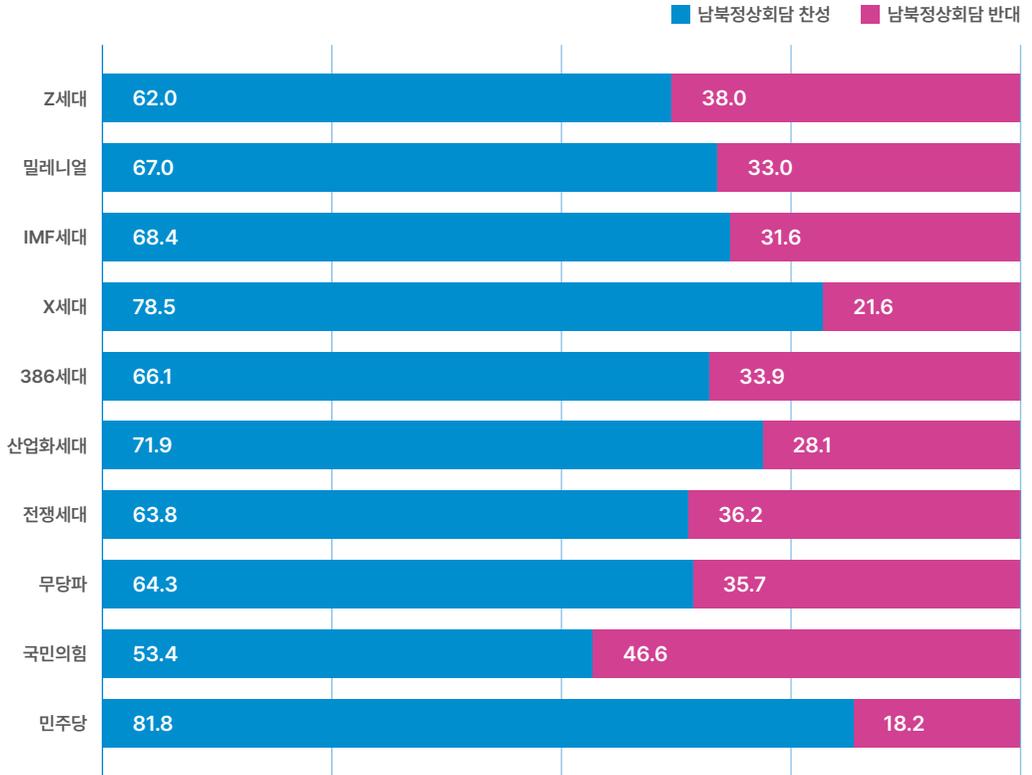
- 질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척도 1=매우 찬성한다; 2=다소 찬성한다; 3=다소 반대한다; 4=매우 반대한다
- 1+2=‘남북정상회담 찬성’; 3+4=‘남북정상회담 반대’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높은 기대감

- 2021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넣어 조사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였는데, 63.8%가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
- 2025년 조사에서는 더욱 높은 69.4%가 정상회담을 찬성하였음. 단, 2025년 조사는 이재명 정부 임기 초에 실시되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차이가 있음. 2021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8.7%를 기록¹
-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81.8% 찬성, 18.2% 반대, 국민의힘 지지자는 53.4% 찬성, 46.6% 반대로 조사됨.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정상회담을 찬성하고 있음.
- 무당파의 경우에도 64.3%가 정상회담에 찬성함. 따라서 정상회담은 진보와 중도를 넘어 보수까지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 리얼미터 2021년 10월 4주차 조사 기준. <http://www.realmeter.net> (최종접속일: 2025년 9월 10일)

[그림 III-8] 남북정상회담 - 코호트별 및 지지정당별 비교: 2025년



IV. 미국인식 및 한미관계



IV. 미국인식 및 한미관계

1.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그림 IV-1]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평가: 2020~2025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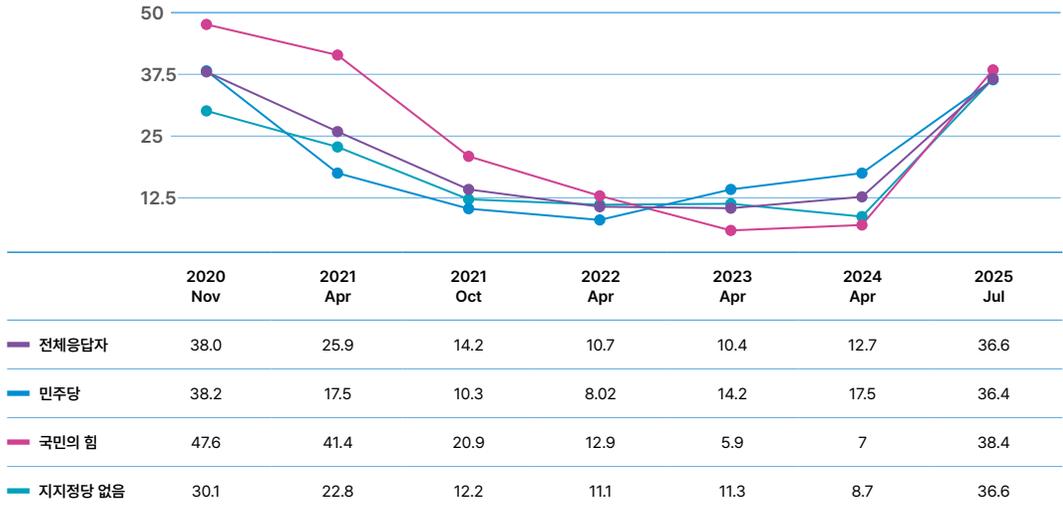
- 질문 “귀하는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1=매우 많이 고려한다; 2=상당한 만큼 고려한다; 3=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4=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인식 강화

- 고려하지 않는다(별로 고려하지 않는다/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23년과 2024년보다 증가한 65.7%로 나타남
- 트럼프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의 65%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우방과 동맹에 대한 노골적인 고관세 및 방위비 인상 압박을 2025년 한국인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보수정당 지지자의 응답률이 2024년부터 높아짐.
- 2024년 미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됨.

2. 한미관계 평가와 전망

[그림 IV-2] 한미관계 악화 평가: 2020~2025



조사문항

- 질문 “지난 1년 동안 한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척도 1=매우 악화될 것이다; 2=다소 악화될 것이다; 3=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4=다소 개선될 것이다; 5=매우 개선될 것이다
- 1+2 = ‘한미관계 악화’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한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인식의 확산

- 지난 1년간 한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2024년 조사보다 약 24%P 정도 크게 증가함. 지지정당과 지지정당 유무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음.
- 5년 뒤 한미관계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022년 조사보다 약 4배 증가함 <[표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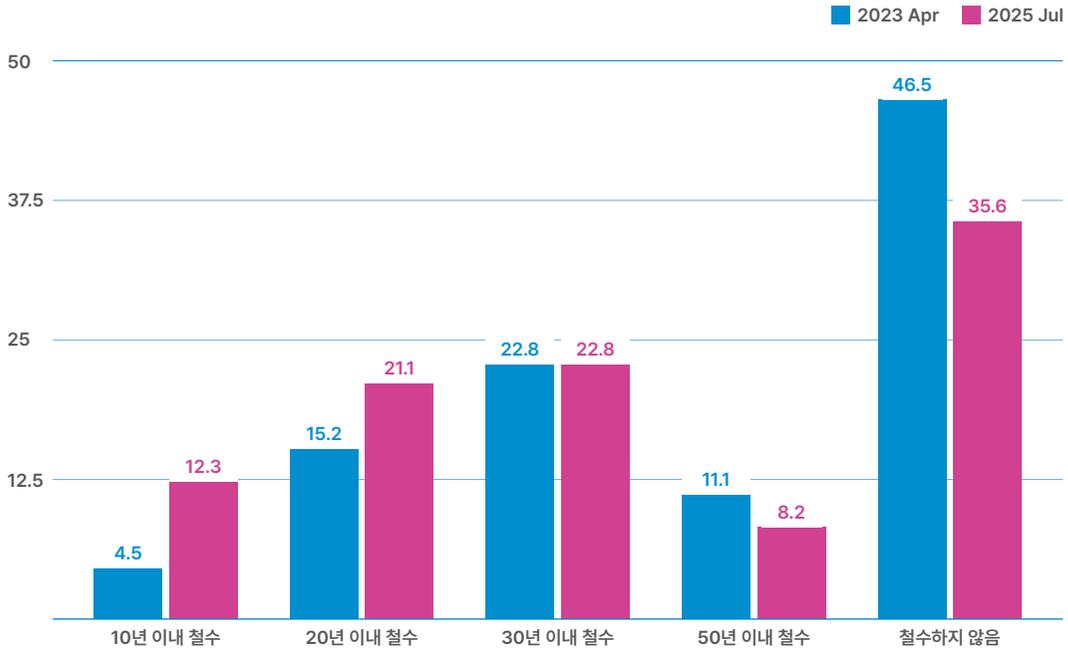
[표 IV-1] 5년 뒤 한미관계 전망(%)

	나빠질 것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2022 Apr	4.8	63.7	31.5
2025 Jul	20.4	56.9	22.6

-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의 당선과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한미관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한미관계 악화의 원인이 미국 때문이라는 응답이 2024년 13.4%에서 2025년 52.9%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함.

3.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그림 IV-3]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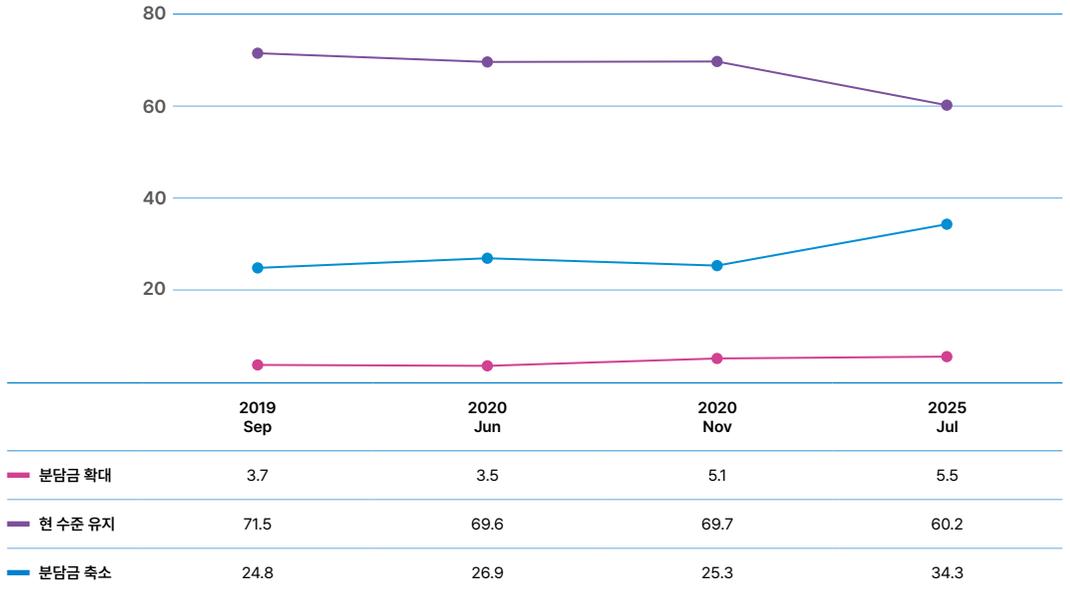
- 질문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1=1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2=2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3=3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4=5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5=미국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추세

- 10년 이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2023년에 비해 8%p 가량 상승
-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6.5%에서 35.6%로 11%p 정도 하락
-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반영됨.

4. 방위비 분담금

[그림 IV-4] 방위비 분담금



조사문항

- 질문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척도 1=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 2=현 수준에서 분담금을 유지해야 한다; 3=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

분담금의 현 수준 유지 선호는 감소한 반면, 축소 선호는 증가

- 분담금 현 수준 유지 선호가 이전 조사에 비해 9%p 줄어들고, 그만큼 분담금 축소 선호가 증가함. 응답자의 3분의 1이 넘는 34.3%가 분담금을 현 수준에서 줄이는 것을 선호
- 한국인들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이 그 부담과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실리주의적 태도가 강화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댓값이 낮아지고 있음.

5. 북미정상회담 재개

[그림 IV-5] 북미정상회담 재개



조사문항

- 질문 “귀하께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1=북미정상회담을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
2=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어느 정도 실질적 진전을 보인다면 재개해야 한다;
3=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재개해서는 안된다;
4=어떤 상황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북미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한 태도는 이전 조사 결과와 유사

-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개에 찬성하는 비율은 18.3%임.
- 본 문항의 결과가 과거 조사와 유사한 응답률 및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인은 북미회담이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 태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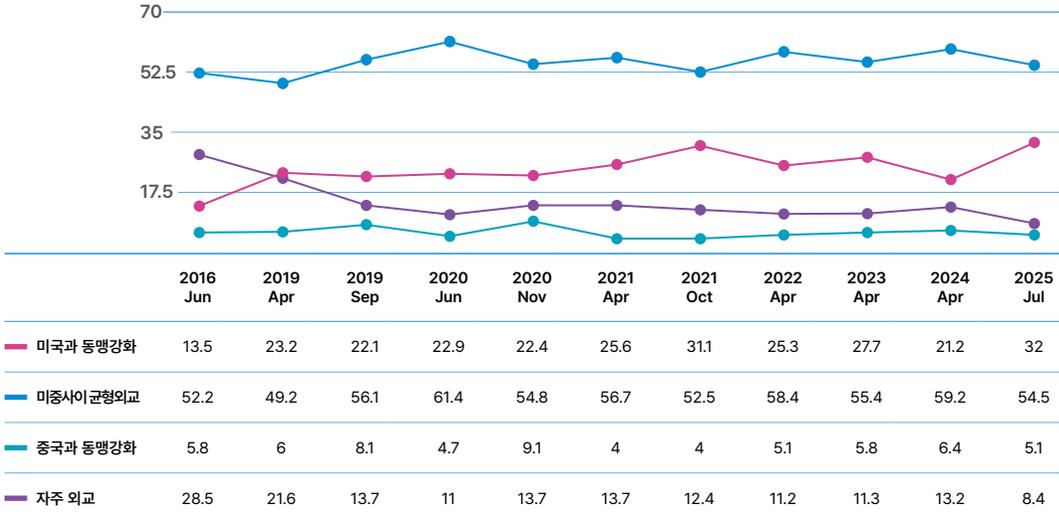
V. 중국인식 및 국제관계



V. 중국인식 및 국제관계

1. 한국 외교의 방향과 미중경쟁에 대한 인식

[그림 V-1]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



조사문항

- 질문 “향후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1=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
2=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한다;
3=미국보다는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
4=미국과 중국과 관계없이 자주 외교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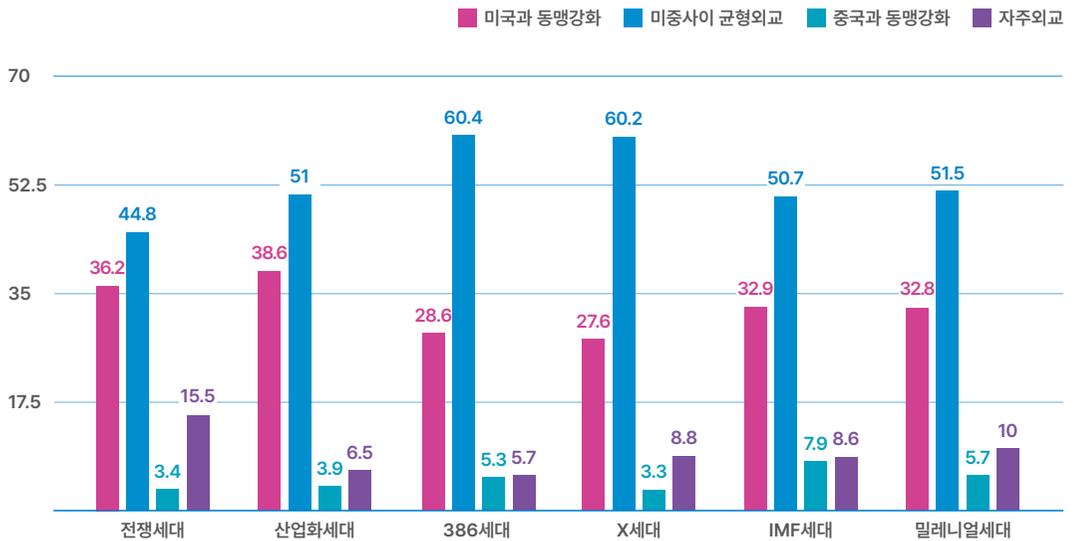
-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2025년 조사에서도 한국인은 균형외교를 가장 선호하지만,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응답이 2024년에 비해 약 11% P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미중경쟁 격화 속에 심화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데 여전히 미국이 한국의 가장 안전한 선택지라는 한국 시민들의 인식을 보여줌.

미국에 대한 불안한 시각이 중국을 중시하는 외교에 대한 선호로 전이되지 않음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나, 불안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인들은 그래도 한미동맹을 안보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2. 대미·대중외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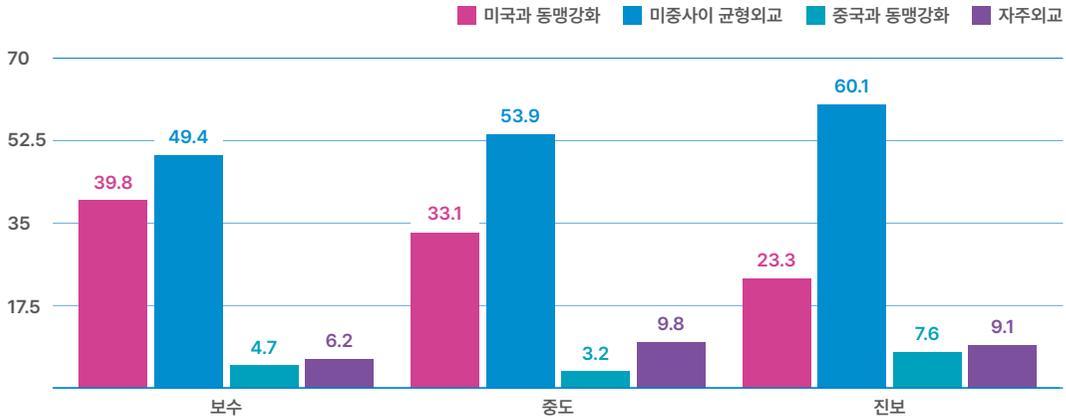
[그림 V-2] 대미·대중외교 지향 - 코호트별 비교: 2025년



미국과의 일방적 동맹 강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

- 전반적으로 균형외교 > 미국과의 동맹 강화 > 자주외교 > 중국과의 동맹 강화 순의 선호를 보임.
- 주로 균형외교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두 선택지에 대한 선호에서 코호트 간 차별성이 만들어짐.
- 중장년층인 386세대와 X세대에서 균형외교에 대한 선호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대한 선호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남. 그러나 노년층과 청년층에서는 그 격차가 뚜렷하게 줄어들음.
- 이는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중장년 세대에서는 미국과의 일방적 동맹 강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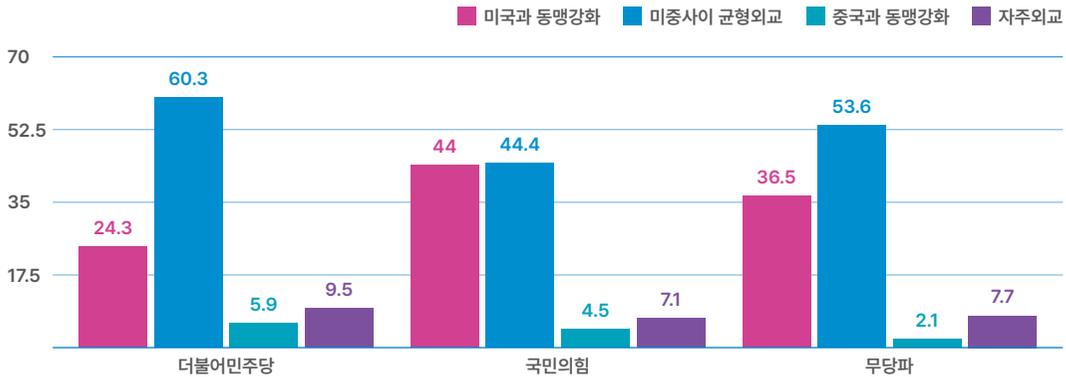
[그림 V-3] 대미·대중외교 지향 - 이념별 비교: 2025년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우려하는 진보

- 이념에 상관없이 균형외교 > 미국과의 동맹 강화 > 자주외교 > 중국과의 동맹 강화 순의 선호를 보임.
- 결국, 진보층이 친중(親中)적 외교정책을 선호한다기보다 보수층과 비교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치우친 외교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V-4] 대미·대중외교 지향 - 지지정당별 비교: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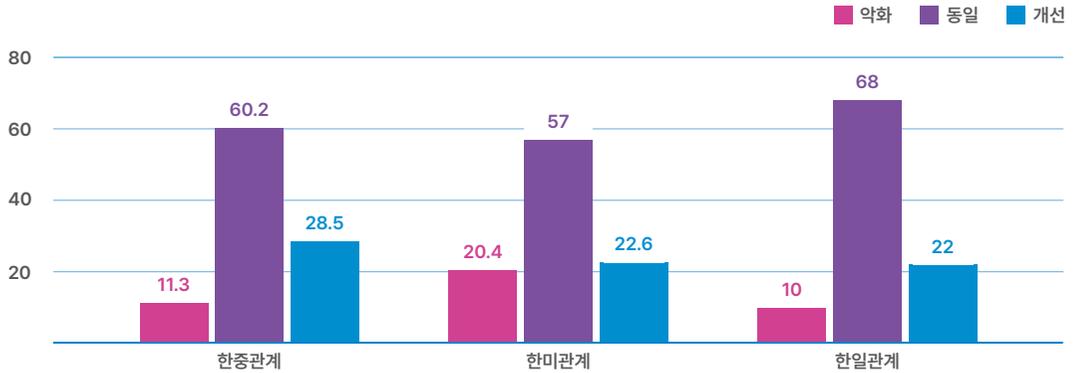
민주당은 균형외교, 국민의 힘은 한미동맹

- 지지 정당별 차이도 이념별 차이와 유사한 패턴이 감지됨.²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균형외교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 간 차이가 36.0%p 나지만, 무당파층에선 17.1%p로 줄어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실질적 차이가 사라짐.
- 반면, 중국과의 동맹 강화나 자주외교에 대한 선호에서 지지 정당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2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명(2.6%)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그림 V-5] 한미·한중·한일관계 전망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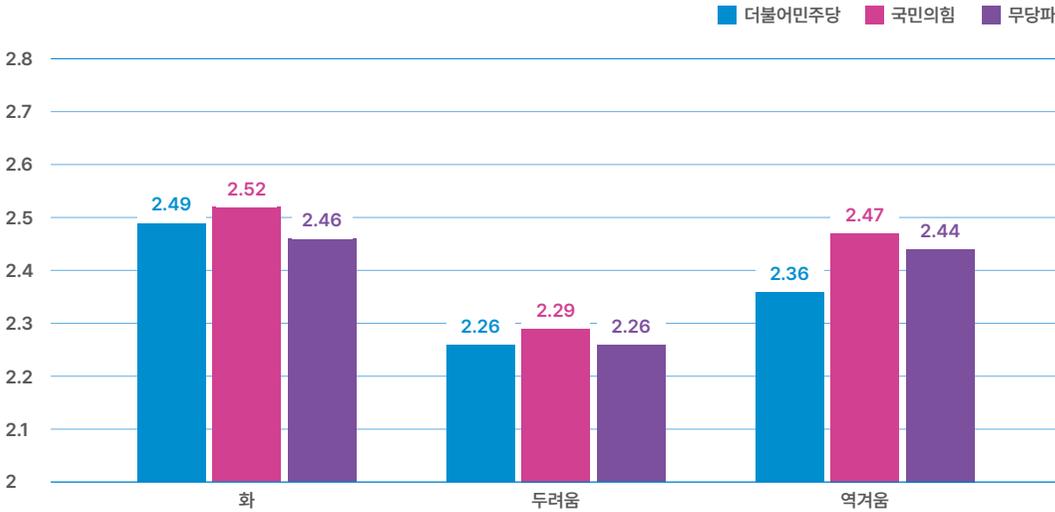
- 질문 “향후 5년 내 (한미/한중/한일)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척도 1=지금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2=지금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3=지금과 같을 것이다; 4=지금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5=지금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 1+2=‘악화’, 3=‘동일’, 4+5=‘개선’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한중관계와 한일관계에 대한 복원 기대감

-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한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한중관계에 대해서 유지(62.4%) > 악화(21.9%) > 개선(15.7%) 순으로 개선보다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반면,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유지(63.7%) > 개선(31.5%) > 악화(4.8%),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은 유지(63.3%) > 개선(22.6%) > 악화(14.1%) 순으로 악화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이는 한·미·일 간 가치 동맹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한 응답자들의 예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변 3국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은 모두 유지 > 개선 > 악화 순으로 나타남.
- 특히, 한중관계와 한일관계에서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10% 초반대임. 이는 한중관계의 복원 외에도 한일관계 개선을 주장한 현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노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중국에 대한 감정

[그림 V-6] 중국에 대한 감정 - 지지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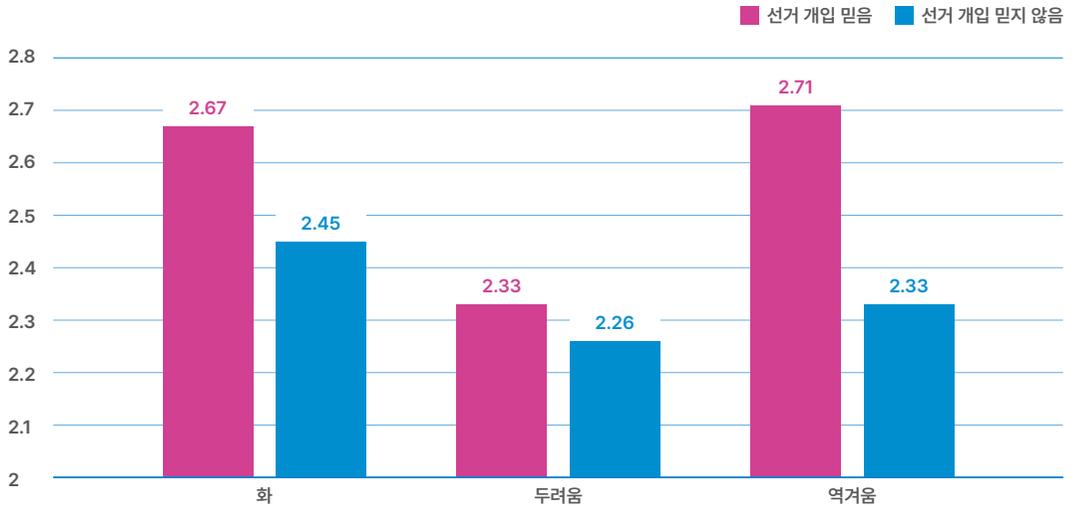
조사문항

- 질문 “중국에 대해 생각할 때 귀하는 어떤 느낌(부정적 감정: 화가 남, 두려움, 역겨움)을 가지게 됩니까?”
- 척도 1=전혀 느끼지 않음, 2=매우 약하게 느낌, 3=어느 정도는 느낌, 4=상당히 느낌, 5=매우 강하게 느낌
- 위 그래프는 각 감정의 평균값을 지지정당별로 비교한 것임.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심각하지 않음

- 화가 남(anger), 두려움(threat), 역겨움(disgust) 모두 평균적으로 2점에서 3점 사이의 값을 가짐. 이는 매우 약하게 느끼는 수준과 어느 정도는 느끼는 수준 사이라 할 수 있음.
- 부정적 감정의 크기는 대체로 화가 남 > 역겨움 > 두려움 순으로 나타남.
- 즉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언급하는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파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부정적 감정이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즉 보수정당 지지층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파층보다 중국에 더 부정적 감정을 지녔다고 할 수 없음.

[그림 V-7] 중국의 한국선거 개입설 신뢰에 따른 중국에 대한 감정



조사문항

- 질문 “최근 제기된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척도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어느 정도 신뢰한다; 5=매우 신뢰한다
- 1+2+3=‘부정선거 개입 믿지 않음’, 4+5=‘부정선거 개입 믿음’

선거개입에 관한 신뢰와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

-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신뢰하는 응답자는 전체 17.8%에 달함. 이는 결코 적은 비율로 보기 어려움.
- 중국의 선거 개입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중국에 대해 더 분노하거나 역겨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반면, 두려움의 감정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두려움, 역겨움, 화 등 부정적 감정은 비민주적 태도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화(anger)는 상대에 대한 폭력을 피하거나 관용하지 않는 행동을 바꿔 폭력을 지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됨(Berntzen et al. 2023).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선거 개입과 같은 음모론에 대한 신뢰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연계될 때 중국인들에 대한 비민주적·폭력적 행동까지도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5. 양안(兩岸)관계: 중국의 팽창에 대한 대응

[그림 V-8] 중국의 대만 병합 시도에 대한 대응-이념별: 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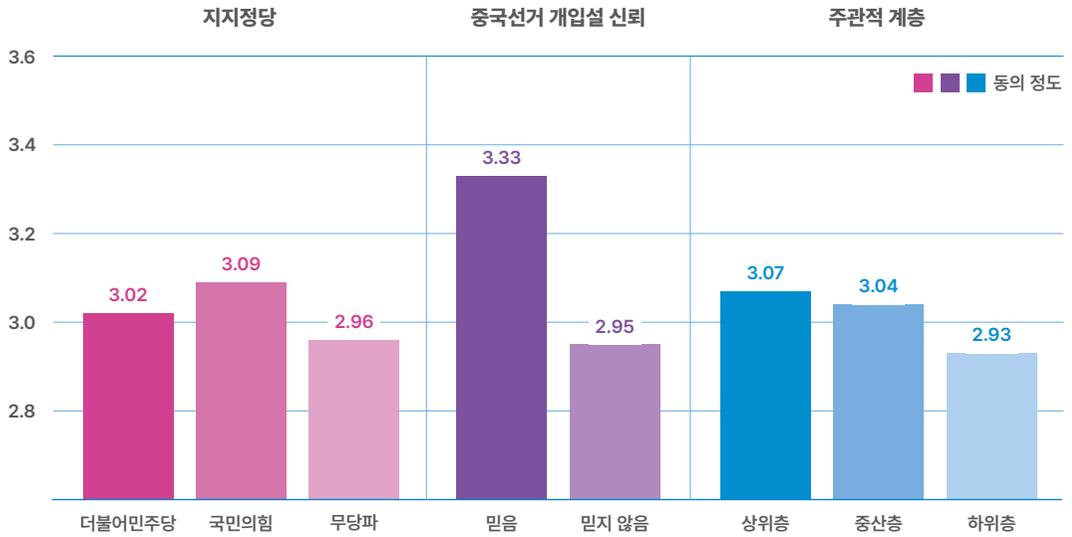
조사문항

- 질문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위 그래프는 이 문항의 평균값을 집단별로 비교한 것임.
- 한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 병합 시도를 막기 위한 미국 중심의 대응에 동참할 때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감수해야 함. 따라서 위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 지지로 해석할 수 있음.

근거없는 진보=친중, 보수=반중 프레임

- 이념을 3개 범주(진보-중도-보수)로 나누어 보았을 때 2021년 이후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만 병합 시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념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2021년에는 동의하는 것에 가까운 3점대 중반이었으나 2025년엔 보통 수준인 3점 정도로 낮아졌음.
-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항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도 신중해진 결과로 해석 가능
- 진보는 친중, 보수는 반중이라는 프레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2021년과 2025년에 진보는 오히려 보수보다 중국 저지를 찬성할 확률이 높았음.

[그림 V-9] 변수별 중국의 대만 병합 시도에 대한 대응: 2025



중국 선거개입 음모론과 중국의 대만 병합 저지

- 지지 정당별로 이를 지지하는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음. 특히, 양대 정당 지지층에선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중국의 선거 개입 음모론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 동의 수준은 뚜렷하게 달라짐. 즉 선거 개입 음모론을 신뢰하는 층에서는 중국의 대만 무력 병합 시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지함.
-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라 동의 정도에서 일정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만, 중국의 선거개입 음모설에 대한 신뢰만큼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함.

